데스크 시각

‘민식이법’은 지켜져야 한다

채희종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장

어린이들의 학교 앞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상당수 운전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이 대세이긴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강력한 처벌만을 내세운,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며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아홉 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제정된 법안으로, 올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 앞 어린이 안전 위한 법

이 법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더불어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의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됐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며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일부 출퇴근 운전자들과 버스·택시 운전사들은 운전 편의와 운행 수입을 감안, 등하교 시 이외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30㎞)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법·규제의 합리성 및 사회적 편익이 대립하는 대목이다. ‘움직이는 신호등’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민식이법에 ‘태클을 걸지마’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니 현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스크를 맡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보기로 했다. 지난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사건기자들로 하여금 등하교 시 스쿨존을 취재토록 했으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직접 초등학교 서너 군데를 돌아봤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대다수가 제한속도 30㎞를 지켰지만 아직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였다. 또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인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사와 봉사자들이 주정차를 막았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내 자식만 안전하게 교문 앞에 내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급히 출근하는 탓이겠지만 스쿨존을 막 벗어난 곳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려 대는 차량도 있었다.

문화초등학교 앞의 경우

취재 중 제보를 받고 간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 정문에서는 진풍경(?)을 목격했다. 이곳에선 오전 8시10분쯤이면 40m에 달하는 도로 전체가 일순간 ‘어린이전용 도로’로 바뀐다. 교사와 봉사자 10여 명이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 20m 구간의 도로를 막아 일시적인 인도를 만든 것이다. 어린이들은 차량 한 대 없는 도로를 안전하게 걸어 교문으로 들어갔다. 교직원들의 출근 차량과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 차량들은 모두 정문으로부터 20여m 떨어진 골목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감내했다.

이 학교는 주택가에 위치한 탓에 주민들이 정문을 지나지 않고 출근하려면 수백m의 좁은 골목길을 한참 돌아야 하고, 등교시키는 학부모들도 같은 불편을 겪지만 불평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물론 수년 전 등하교 시간에 정문 앞을 처음 통제할 때는 항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어른들의 동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런 광경을 보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떠오른다.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K방역의 선진국으로 자랑스러워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편리와 권리를 양보한 대가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학교 앞 어린이 안전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무엇이 있겠는가? 법률적 논리와 사회적 편익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뉴스를 이젠 그만 보고 싶다.

운전 중 불편은 견딜 수 있는 것이되, 아이의 목숨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켜야 한다. 다만 민식이법에 따른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면, 법률적 논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문화초등학교에서처럼 교사·학부모·주민들까지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은펜칼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환
함평 강운교회 장로

요즘의 멈춤, 절제, 연기, 비대면(Untact) 생활은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우리의 일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보고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공포의 세상이다. 올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6월 6일 현재 국내 확진자는 1만 1719명, 사망 273명, 국외는 확진 667만여 명, 사망 39만여 명으로 5월 21일 이후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매일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인류 질병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총성 없는 혹독한 전쟁이며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재택·원격 근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힘쓰며 모임·여행 자제, 휴교 등의 조처도 있었다. 또한 올 4월 총선과 등교 개학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질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과정에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데 이는 방역에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경험, 방역 시스템’을 공유하며 대처·확산 방지 해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의 교과서적 우수 사례로 다른 나라처럼 전면적 국경 봉쇄나 이동 제한을 강제하지 않고도 코로나를 억제했다”고 보고했다. 그 후 한국의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을 원하는 나라가 120여 개국 이상으로 1천조 원 넘는 세계 시장에서 K-방역 바람으로 진단 키트·주사기·마스크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신뢰가 제고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다른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물류센터 등의 집단 감염에 이어 요즘엔 소규모 모임에서도 감염이 일어나 혼란스럽다. 이는 성공적 방역 사례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개인·집단적 이기주의, 안전 불감증, 방심이 불러온 결과다. 다시 온 국민의 단합이 더욱 필요한 때다.

한편,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진단 키트부터 방역 정책까지 우리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5월 5일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비용을 위한 온라인 모금 행사가 있었다. 유럽연합 주도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30여 개 국가 정상들이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21세기의 세계적 공공재’가 될 것이다. 이렇듯 코로라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과 함께 각국에서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치료제 출시와 내년 하반기에 백신을 생산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제 우리는 방역·경제·외교 ‘트리플 리더십’에 성공하여 질병 예방·치료 모범 답안을 도출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여 위상을 더욱 높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20세기가 미국·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였다면, 21세기는 이런 국제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앞으로는 세계사의 변천을 새로운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즉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인공 지능(AI)과 로봇의 결합, 증강 현실, 무인 산업(제조·배송·판매·운전), 4D 프린터 활용, 생명 공학, 그리고 초고속 교통망 등 4차 산업 혁명의 모습들이 더 현실화될 것이다.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 각종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폭넓은 연구들이 글로벌 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모든 영역에서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생존과 번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디지털에 의한 의학 혁명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세계사의 전환점이 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기 고

윤달, 양력과 음력 사이를 메운 비밀의 시간

서금석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몇몇 분들이 연락을 해 왔다. 조상님 산소를 옮기는 이장(산일)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음력 4월이 윤달이기 때문에 4월에 해도 괜찮냐고 묻는다. 그럼 간단히 대답해 드린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날씨 좋은 날을 택해 이장을 하세요.”

‘시간’을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기회가 되면 윤달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후기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에 “(윤달에) 세속에서는 혼인에 적당하고, 또 수의(壽衣)를 짓기에 적당하다고 여기며,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百事不忌)”고 적고 있다.

윤달을 특별히 대했던 것은 태음력을 썼던 동아시아의 독특한 관념 때문이었다. 관념이 일반화되면 그것은 문화가 된다. 옛 국왕들도 민간에서 유행하는 풍습을 묻고 오히려 그것을 따랐다. 일종에 유행을 따른 것이다.

윤달(閏月)의 윤(閏)자는 ‘쓰고 남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식이 아니고 정통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윤달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다. 한자를 풀어쓰면, ‘문(門) 안의 왕(王)’이다. 고대 주나라 임금은 매월 초하루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윤달 초하루는 종묘가 아니라 침전의 문 안에 있었다 하여 문(門) 속에 왕(王)자를 넣어 윤(閏) 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중국 세시기 중에 가장 오래된 ‘형초세시기’는 6세기 초나라의 세기와 풍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윤달에 “모든 일을 거행하지 않는다(不擧百事)”라고 했다. 윤달에 어떤 때는 “모든 일을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윤달이 결혼 등 길사(吉事)에 좋지 않다고 하고, 반면에 옛 책에는 윤달에 혼인이 적당하다고 한다. 지금도 윤달에 이장을 하면 탈이 없다는 속설이 있다. 시대별 유행이 이렇고, 윤달이 그렇다.

태양의 주기 1년, 대략 365.5일은 농작물 재배와 수확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태양은 삶의 주기이다. 낮은 활동의 무대이다. 다만 태양으로 한 달을 잴 수가 없다. 밤중에 뜨는 ‘달’은 그 모양새부터 주기적으로 변한다. 보름달의 주기는 거의 29.5일이다. 한 달을 29일, 그 다음 달을 30일로 맞춰 이 소수점을 해결했다. 1년 열두 달은 태양의 주기와 비교하여 11.5일 정도 부족하다. 이 남은 날짜들을 모아 모아서 2~3년마다 따로 한 달을 만들어 내어, 태양력의 길이에 맞췄다. 달의 시간 길이를 태양의 길이에 꿰맞추려는 인류의 놀라운 창작품이 윤달이다. 그래서 태양도 살리고, 달도 살려 내어 함께 세월을 누렸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다. 우리네 생체 리듬은 활동과 휴식의 흐름이다. 그 속에서 삶의 여러 박자가 만들어진다. 태양과 달이 그들의 상상을 연결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다. ‘남은 달’인 윤달에 “무엇을 할까?” 그 고민이 태음력에 익숙한 옛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 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다.

흔히 태양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24절기를 말한다. 숫자일이 아니다. 반면에 태음력은 육십갑자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숫자일로 달력에 기입된다. 매월 초하루부터 시작된다. 1주기가 삶의 주기이듯 태양의 주기를 이르지만 태양력은 숫자일이 아니다 보니 숫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태음력의 길이를 가져다가 대신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354일 만에 한 주기가 찾아오고, 윤달이 들어있는 해에는 384일이 1주기가 된다. 어긋난 기일의 시간 단위이다.

1주기, 곧 기일은 태양이 다시 그 자리에 오는 날이다. 기일은 주기의 시간이자 동시에 만남의 시간이다. 마치 가족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날과 같다. 산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간에 좋은 날을 잡아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좋다. 음력 속에 마치 숨겨져 있는 듯한 지금의 윤달 풍속도 시대별로 달라질 것이다. 음력의 용도는 예전만 못하다. 설날이나 추석의 비중을 강조하는 선에서 음력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社 說

아직도 전두환 ‘일해공원’ 존재하고 있다니

‘전두환 공원’인 일해공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전두환 생가도 보존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 중이지만 유독 합천군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공원은 2007년 전두환 씨의 아호인 ‘일해’(日海)를 따 ‘일해공원’으로 바뀌었다. 공원 입구에는 전 씨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졌다. 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최근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지역 한 시민단체는 어제 일해공원 앞에서 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죄 많은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데, 이는 아직 과거가 청산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원 이름이 일해공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 생가를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열을 올렸다. 이들의 지적에 의하면 심지어 전두환 씨의 생가에는 버젓이 ‘국가 위기를 수습해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는 망언이 적혀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을 대형 현수막으로 가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현수막에는 ‘참회 없는 전두환!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의 지적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의 생가를 국·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해공원의 이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줄줄 새는 상수도관 교체에 집중 투자해야

올해로 광주에 수돗물이 공급된 지 100년을 맞았지만 노후 상수도관이 절반에 육박하는 데다 수돗물 누수율도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돗물 오염 사고도 끊이지 않아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광주 시내 상수도관 3933㎞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48.2%인 1896㎞에 이르며 1988년 이전에 제작돼 30년이 넘은 관로도 14.6%나 된다. 더욱이 이들 노후 상수도관은 대부분 내부가 빠르게 부식되거나 코팅이 잘 벗겨지는, 지금은 사용이 중단된 재질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유입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낡은 상수도관은 수돗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는 누수의 주범이기도 하다. 광주의 상수도 누수율은 2015년 기준 13.3%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8.6%에 비해 훨씬 높다. 연간 누수량은 1800톤 이상으로, 생산 원가로 치면 100억 원어치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교체는 뒷전인 채 배수지 공사 등 사실상 후순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비전문가인 행정직들이 본부장부터 사업소장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 구조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상수도 정책과 조직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광주시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G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을 G11으로 개편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G7(Group of Seven)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7개 선진국을 말한다. 속칭 ‘선진국 클럽’이다. G11은 여기에 우리나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확대하자는 것이다.

G7은 1973년 오일쇼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5대 경제국(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됐다. 2년 뒤인 1975년 2차 오일쇼크가 터지자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이듬해엔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했다. 다음 해에는 러시아가 회원국 지위를 얻으면서 G8이 됐지만 2014년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퇴출돼 지금의 G7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량은 전 세계 국가 GDP의 46%가 넘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해졌다. G7 국가 중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미흡과 함께 국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전 세계에 ‘민낯’을 드러냈고, 1970년대 구성된 낡은 체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면 K방역을 계기로 형성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G7 확대의 배경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회원국이었던 자신들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를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G7 합류를 위해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